

No. 2013-49

일본 경제 동향

(Japan Weekly Economic Digest)

2013. 12. 09

- ① 일본경제지표
- ② 주간경제이슈
: 일본의 신에너지기본계획(안)
- ③ 경제정책동향
- ④ 일본기업동향
- ⑤ 한국관련워치

1 일본경제지표

□ 주간 상황지표

- 엔화환율: 미국의 경제지표 개선, 일본은행의 추가 금융완화 예상 등으로 103엔 대까지 약세
- 장기금리: 일본은행의 국채매입공개시장조작에 따른 국채의 매도세 우세로 상승세

구 분	12.2(월)	12.3(화)	12.4(수)	12.5(목)	12.6(금)
엔화의 대미달러화 환율(달러당)	102.45	103.08	102.58	102.43	101.85
엔화의 대원화 환율(100엔당)	1,032.42	1,027.44	1,036.38	1,036.94	1,043.53
닛케이평균주가(종가)	15,655.07	15,749.66	15,407.94	15,177.49	15,299.86
장기금리(10년물 국채금리, 연리%)	0.610	0.630	0.630	0.645	0.670

□ 주요 거시경제지표

- 2013년 3분기 실질 GDP성장율은 전기비 0.5%(연율 1.9%)로 4분기 연속 플러스
- 2013년 10월 소비자물가는 5개월 연속 전년수준을 상회
- 2013년 10월 무역수지는 연료수입 증가로 적자폭이 1.1조 엔으로 크게 확대
*對한국 무역수지는 1.3천억 엔 흑자로 흑자폭이 축소

구분	2012	201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실질GDP증가율(연율,%)	1.2(2.0)	4.1			3.8			1.9(P)			-	-
수 출(천억엔)	639(637)	48	53	63	58	58	61	60	58	60	61	-
수 입(천억엔)	721(707)	64	61	66	67	68	62	70	67	69	72	-
對한국 수출	49.7(49.1)	4.01	4.25	5.21	5.07	4.61	4.54	4.77	4.59	4.57	4.64	-
對한국 수입	32.8(32.4)	3.12	2.92	2.81	2.58	2.85	2.57	3.04	2.78	2.72	3.29	-
직접투자(억달러)	(1,223)	234			331			479			-	-
對한국 투자	(40)	7.7			9.1			8.6			-	-
소비자물가(전기비,%)	▲0.2(0.0)	▲0.3	0.1	0.3	0.3	0.2	0.0	0.1	0.3	0.1	0.2	-
실업율(%)	(4.4)	4.2	4.3	4.1	4.1	4.1	3.9	3.8	4.1	4.0	4.0	-
경상수지(천억엔)	42.9(47)	▲3.6	6.4	12.5	7.5	5.4	3.4	5.8	1.6	5.9	-	-
엔화 對미달러 환율	82.9(80.1)	89.2	93.2	94.8	97.7	101.0	97.4	99.7	97.9	99.2	97.9	100.0
환율 對원화(100엔)	(1,413)	1,197	1,166	1,161	1,148	1,100	1,165	1,130	1,142	1,095	1,090	1,064
외환준비(억달러)	12.5(12.7)	12.7	12.6	12.5	12.6	12.5	12.4	12.5	12.5	12.7	12.8	12.8
국채금리(10년, 연리%)	0.560	0.740	0.665	0.560	0.600	0.860	0.855	0.795	0.720	0.680	0.590	0.600

주1. ()는 역년(1~12월)기준

2. 소비자물가, 실업률, 환율은 기간평균, 자료 : 닛케이신문, 재무성, 한국은행

3. (P)는 1차 속보치

□ 주요 보고서 워칭 사이트(report watching site)

-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효과』 일본정책금융공고, 12월4일
*출처:http://www.jfc.go.jp/n/findings/pdf/ronbun1311_03.pdf
- 『FTA와 수출 플랫폼 형 외국직접투자(영문)』 경제산업연구소, 12월6일
*출처:<http://www.rieti.go.jp/jp/publications/summary/13120002.html>

② 주간경제이슈 : 신 에너지기본계획안 발표

□ 원전 재가동 방향으로 재평가

- 일본정부는 12월 5일, 신에너지기본계획(안)에서 원전이 중요한 기본 전원이라는 인식하에, 과거 민주당 정부의 원전가동제로 방침에서 전환
 - 원전을 안정적인 전력공급, 온난화대책, 연료비 억제 등 3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전원이라고 재평가하는 한편, 재생에너지를 축으로 전원을 다양화하는 방침도 명확히 밝힘
- 안전이 확인된 원전에 대해서는 연료비 억제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중요한 전원으로 설정하고 재가동하는 쪽으로 전향적인 자세를 보임
- 에너지기본계획은 일본정부의 중장기적인 전략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2003년부터 책정해오고 있는데, 이번 3번째 개정에서는 민주당 정부가 2차 개정내용을 원전사고 후에 수정한 「혁신적인 에너지환경전략」을 재검토
 - 내년초 각의 결정을 목표로, 5일 모테기 경제산업상이 아베총리에게 기본계획안의 큰 틀을 보고하고 6일 기본정책분과회에 제시

□ 일정비율만큼 원전을 확보기로

- 신 계획에는 민주당이 혁신적인 에너지·환경전략에서 제시한 원전제로방침을 철회하고, 장기적으로 원전을 일정비율 확보할 방침을 제시한 동시에, 원전의 신·증설은 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삭제
- 원전사고 후에 개정된 「원자로 등 규제법」에서는 원칙적으로 40년 이상 가동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
 - 원전의 신·증설과 기존 원전의(부지 내에서 구 원자로)재건축이 가능하지 않으면 2050년까지 가동할 수 있는 원전이 없어지게 됨
- 한편, 전력의 몇 %를 원전으로 확보할 것인가 하는 전원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보류
 - 안전 확인을 위해서는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한데, 몇 기가 가동될 수 있을 것인가는 현재 단계에서 예상할 수 없기 때문임

□ 원전 재가동을 위한 보완조치 마련

- 이번 개정안은 원전사고 후 원자력 추진에 신중한 여론을 의식하여 사고의 위험성을 수치로 제시한 「확률론적인 리스크평가(PRA)」의 도입과 함께, 업계의 자율적인 안전대책 추진의 필요성도 담고 있음

- 장기적인 과제로서 폐로·오염수 대책도 언급하고 있는데, 수준 높은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처분장이 하나도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면에서 나서 과학적으로 적합한 지역을 선정할 방침
- 원전중단에 따른 연료비 증가는 가계와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신 계획에서는 원전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회피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원전 중단을 보완하기 위한 화력발전 연료비는 지진발생 전과 비교하여 부담액이 연간 3.6조엔 증가
- 지진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가정의 전기요금은 월 1,000억 엔 정도 늘어나고 2012년 무역적자는 과거 최대인 6.9조 엔까지 확대
- 일본정부는 지진 이후 원전 중단으로 인한 전력부족과 연료비 급등을 석유위기 이후 최대 에너지제약이라고 심각한 입장을 표명
 - 석유위기 이후는 에너지절약 관련 기술혁신으로 대응했는데, 이번에는 에너지공급의 다양화를 추진하여 시장의 창출로 이어지게 한다는 구상임
- 전원의 다양화로 수입연료에 의존하는 않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가스생산국들과의 가격교섭력도 높일 수 있다고 함
- 수입연료의 가격억제와 관련해서는, 북미산 셰일가스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점도 명기

□ 재생가능에너지 제도 도입 확대

- 재생가능에너지제도에 대해서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도입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목표
-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고정가격매입제도는 태양광발전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비교적 코스트가 낮은 풍력과 지열발전 보급을 추진
- 그러나 이들 전원은 송전선망의 한계와 고비용 등의 과제가 있어 저비용 전원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전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임

□ 시장개혁을 통한 전원공급자의 다양화

- 새로운 계획에서는 공급자의 다양화도 제시
- 금년 11월에는 전기사업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역독점체제가 계속되어온 전력시장이 60년 만에 전기를 맞고, 가스시장에서도 전면자유화 논의가 시작됨
- 앞으로 시장개혁을 통하여 전력과 가스 석유 등의 상호진입에 의한 종합에너지 산업을 창출시킴으로써 요금 메뉴와 서비스 폭을 확대해나갈 방침

③ 경제정책동향

□ 일본의 GDP와 경상수지에 기여하는 방일 외국인

- 엔저 등을 배경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음
 - 2013년에 일본정부가 목표로 한 연간 1,000만 명대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음
 - 금년 1~10월 누계로 방일 외국인수는 866만 명으로 과거 최고였던 동일본대지진 이전(2010년) 수준을 넘고 있음
 - 특히 아시아국가로부터의 방일객이 구미로부터의 방문객수를 크게 상회
- 방일 외국인 증가의 배경으로는 엔저 외에도, ▷아시아 중간소득층의 소득증가에 따른 잠재적 여행수요 확대, ▷대지진 직후 대폭적인 감소로부터의 회복,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저가항공(LCC)의 증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비자발급조건 완화 등을 들 수 있음
- 일본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은 한정적이나,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소비에 의한 내수를 무시할 수 없게 될 만큼, 소위 ‘밖으로부터의 내수’가 일본의 내수에 한 몫을 하고 있음
 - 미즈호종합연구소의 시산결과에 따르면, 방일 외국인이 1,000만 명에 이르는 경우, 2.1조 엔의 소비증대효과, 파급효과까지 포함하여 2.6조 엔의 GDP증대효과(GDP의 0.6%), 2012년 대비 0.1%의 경제성장을 증대효과가 있음
 - 일본정부의 목표대로 2020년 2,000만 명이 달성될 경우 GDP증대효과는 5.3조 엔(GDP의 1.1%)까지 높아지며, 만일 방일 아시아인들의 소득수준 상승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경우 그 효과는 2~3배로 확대
- 한편, 방일외국인의 소비가 일본의 산업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본은행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유발생산액은 약 3조엔, 유발고용자수는 20만 명
 - 소비관련 업종별로 보면 숙박업에서는 방일외국인 소비비중이 6~7%에 달하고 있으며, 음식업과 여객운송업에 대한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 파급효과를 부문별로 보면, 대 개인서비스업을 필두로 운수, 상업에 대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제조업을 포함하여 폭넓게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일본정부는 내년부터 방일 외국인에 대한 소비세 면세대상품을 확대할 예정
 - 신규로 화장품과 식료품 주류 등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인데, 2014년에는 소비세 증세로 소비둔화가 우려되는 만큼, 방일 외국인이 개인소비를 지탱해주는 부분이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

□ 일본정부, 동남아와 중동 등에 에너지절약 노하우 전수

- 일본정부가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에 일본의 에너지절약에 관한 노하우 전수
 - 일본 국내에서 에너지절약에 효과가 있었던 자격제도와 제품의 성능을 표시하는 방법 도입을 위한 지원을 실시
 - 에너지절약 성능이 높은 일본제품의 보급에도 이어지는데다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에 필요한 전력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일본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음
- 파일럿 프로젝트로 정부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베트남정부를 지원
 - 베트남은 내년부터 전력·연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 등에 배치를 의무화하는 에너지관리사 자격제도를 창설할 예정
 - 이에 자격시험과 연수내용에 관한 일본의 노하우를 전수하여 연구시설의 정비나 지도자 육성에서도 협력할 계획
 - 냉장고나 에어컨 등 가전제품의 에너지절약제품에 대한 라벨표시 관련 지원도 실시할 계획
 - 베트남은 이미 금년부터 에너지절약 라벨표시제도를 도입했으나, 실제 성능을 평가하는 정부의 시험체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음
- 일본정부는 앞으로 필리핀과 오만 등 중동에도 지원해나갈 방침
 - 중동지역의 경우 에너지자원이 풍부하나, 이 같은 유리한 자원여건이 오히려 에너지효율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국가들이 많음

4 일본기업동향

□ 일본 자동차업체, 동남아에서 에코 카 판매 · 투자확대

- 일본의 자동차업체들이 동남아시아에서 연비성능이 높고 배기가스가 적은 에코 카(친환경차) 판매를 확대
 - 마쓰다는 태국에서 200억 엔을 투자하여 최신 저연비 엔진의 대형공장을 건설, 현지생산 차량에 탑재할 계획
 - 도요타자동차 등도 경자동차 기준의 저연비차량을 투입할 예정
- 동남아지역에서는 자동차 보급에 따른 환경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에코 카에 대한 우대책을 도입하고 있는데, 일본기업들은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보다 앞서 사업 확대에 주력
 - 태국에서는 휘발유 리터당 20킬로미터 이상 주행 가능한 차량을 연간 10만대 생산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 사업세를 면제
 - 인도네시아에서도 일부 저연비차량에 대해 구입 시 세금을 면제
- 동남아시아에서는 일본기업들이 80%의 시장점유율을 장악하고 있으나, 독일 폭스바겐과 미국 GM 등이 공장을 건설하고 있어 새로운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음
 - 마쓰다는 2015년에 방콕 교외에서 신규 공장을 가동, 독자적인 저연비기술인 스카이엑티브 기술을 사용한 연간 20만대 규모의 최신 엔진을 생산할 예정
 - 신규 공장에서 생산되는 엔진을 미국 포드사와의 합작공장에서 조립하는 주력차종 「아쿠세라」 등에 탑재하는 한편,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에 있는 완성차의 생산위탁처에도 공급할 예정
 - 도요타자동차도 소형차 「야리스」를 개량하여 태국에서 발매
 - 연비성능은 리터당 20킬로를 상회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자회사인 다이하츠공업의 경자동차 기술을 활용한 저연비차량을 투입할 예정
 - 혼다는 태국 등에서 저연비 차량에 더하여 하이브리드차량을 생산
 - 동남아시아에서도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스즈키는 인도네시아에서 930억 엔을 투입하여 소형차와 엔진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 중
 - 인도네시아의 에코 카 우대 제도를 활용한 대형투자
- 미국 컨설팅 전문기관 프러스트 앤 설리반에 의하면, 주요 동남아 6개국의 자동차 판매대수는 2019년에 500만대로 현재의 일본시장수준으로 확대될 전망
 - 동남아 각국 정부가 환경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커, 에코 카의 기술력이 각사의 점유율을 좌우할 것으로 관측

□ 2013년도 설비투자, 통신·건설부문의 견인으로 최대 증가율 기록

- 닛케이신문이 발표한 2013년도 설비투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전 산업의 설비투자액은 전년도 실적대비 13.1% 증가로 2008년 리먼 쇼크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자동차와 전기 등 32개 업종 중 17개 업종이 설비투자를 상향 수정한 결과, 전체로는 2010년도 이후 3년 만에 증가를 기록한 가운데, 통신과 건설 등의 설비투자가 크게 증가
 - 이 같은 조사결과는 기업들의 수익개선과 일본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투자가 살아나고 있음을 반영
- 이번 조사는 10월말 시점의 설비투자 수정계획을 조사한 것으로서 집계대상은 1,393개사, 금년도 투자총액은 13.1% 증가한 25조 9,949억 엔, 증가율은 자동차 등의 국내투자가 활발했던 2005년에 필적하는 수준
 - 대내외 투자내역을 비교할 수 있는 842개사의 계획에서는 일본 국내가 전년도 대비 14%, 당초(계획) 대비로는 1.4% 증가
 - 전체 투자를 견인한 비제조업이 당초 대비 3.8%, 전년도 대비 14.6% 증가
 - 제조업에서도 국내투자는 당초 대비로는 거의 늘어나지 않았으나 전년대비 8.5% 증가
 - 소비세 증세 전 가수요와 함께, 투자 감세책을 기다려 투자를 미루는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해외투자는 전년도 대비 33% 증가로 2.1% 상향 수정
 - 투자의 대내외 비율에서, 해외투자가 처음으로 40%를 넘었는데, 엔저로 엔 환산 해외투자가 확대된 효과도 있으나,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사업 추진도 원인

5 한국관련워치

□ 한국을 엄습하는 미니 6중고

- 11월 6일, 서울에서 개최된 외국인 투자자문단 회의에서 일본기업들의 모임인 SJC(서울저팬클럽)가 한국 정부에 4개항의 제도개선을 요청
 - 산업수당의 경우 기업은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한 분에 대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된 시급의 50%이상 금액을 지급
 - 문제는 정기보너스로 이제까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2년 3월 대법원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불하는 경우는 포함될 수 있다는 판단
 - 한국의 대법원은 이르면 금년 중 최종 판단을 할 전망인데, 한국경영총협회는 사법부 판단대로라면, 향후 산업계 전체로 부담액이 연간 8조 9천억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
 -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 인건비가 평균 15.6% 증가할 것이란 조사결과도 있어 기업은 대응책을 강구해야 함
 - 기타, ▷전력요금 인상, ▷복지재원 염출을 목적으로 한 기업에 대한 엄격한 세무조사,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강화 등임
- JERTO 서울사무소 소장에 따르면 일본의 6중고와 흡사한 상황으로, 원화약세와 낮은 법인세율 등을 내세워 기업 친화적이었던 前 정권과는 어딘가 다른 분위기라는 것
- 그러나 닛케이는 경솔한 판단은 금물이라고 하면서, 일본의 한 대형 소재업체가 한국에 대해 아직 매력적인 투자대상국이라고 말한 점 등을 들어 ‘미니 6중고’ 라고 보도
 - 전기요금은 올랐어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원화강세도 리먼 쇼크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 현재까지는 미니 6중고라고 부르는 편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것
-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환경규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나, 문제는 한국정부가 사태를 충분히 컨트롤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임
 - 정기보너스를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른 대응임
 - 사법부가 들인 정부의 방침을 뒤집은 것은 한일 현안인 강제징용자에 관한 소송과 구도가 흡사하다는 것
 - 화학물질의 규제 법률도 산업계와 서로 부딪치며 조정하고 통합된 정부안은 실현되지 않고 의원입법으로 통과
- 장기적으로는 원화강세에 따라 한국에서도 제조업의 공동화우려도 나타나고 있음
 - 성장을 견인하고 외자를 유치해온 삼성 등 재벌기업들이 6중고에 염증을 낼 때, 진정한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닛케이는 보도